

<9월 셋째주 경제 브리핑(10-16)>

[거시] 금통위, 10월까지 기준금리 현 수준(1.50%) 유지

[조세] 기재부, 공공기관 중장기('15-'19년) 재무관리계획 국회에 제출

[산업] 취업자당 부가가치 기준 한국 제조업 생산성, 2008년 일본 추월

[지역경제] 원주·울주·순창·영천 투자선도 시범지구로 선정

□ [거시] 금융통화위원회, 10월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기준금리 현 수준(1.50%) 유지

○ 9.11.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발표

○ 주요 내용

- 해외경제

(미국) 회복세 지속. (유로) 개선 움직임. (중국 등 신흥시장국) 성장세 둔화 지속

- 국내경제

(소비, 투자 등 내수) 회복 움직임. (수출) 감소세 지속

(고용) 취업자수 증가세 둔화: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하락하고 실업률은 상승

- 소비자물가

석유류가격 하락에도 8월중 공업제품가격 오름폭 확대로 전월과 같은 0.7% 상승

물가상승률은 저유가의 영향 등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 지속

- 금융시장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로 주가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 상승

장기시장금리는 안전자산 선호 등의 영향으로 하락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증가세

○ 함의 및 전망

- 18일 3시(한국시각) 예정된 FOMC의 통화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정책금리 인상 여부가 세계 경제의 초미의 관심사임. 8월중 미국 제조업생산 및 소매판매는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예상치를 하회함에 따라 통화정책 정상화 시기상조론에 힘이 실리기도 함. 그러나 여전히 ECB, OECD, IMF, 세계은행 등 주요 기관들을 포함한 여러 기관과 학자들 간에 당·부당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임

- 인민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견지하는 가운데 일본은행도 9월15일 통화정책 의사록을 통해 현재 0%인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에 달하기 전까지는 현재의 양적 및 질적 완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어 FOMC의 정책금리 현행 유지 발표시,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현행과 같이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인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물가는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나 연말까지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와 함께 주택가격 상승세의 지속 여부가 중요 고려사항이 될 것임
- 한편, 수출 둔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올 들어 환율 급등락으로 변동폭이 커짐에 따라 향후 통화정책 운용방향이 이전보다는 좀 더 환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임

원/달러, 원/엔 환율 동향



□ [조세] 기재부, 공공기관 중장기('15-'19년) 재무관리계획 국회에 제출

○ 9.16.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15 ~ '1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 주요 내용

-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5~201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9월 11일(금) 국회에 제출하였음
 - *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자본잠식 또는 손실보전규정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39개 기관)은 2012년부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 제출해 왔음
- 당초 2017년 달성 계획이었던 총 부채비율 200%이내 목표를 금년 말 달성할 전망이며, 향후 5년간 총부채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9년 160%대 전망하고 있음

2014년 계획 대비 2015년 계획 비교(단위: 조원, %, %p)

구 분		'14(실적)	'15	'16	'17	'18	'19
'14~'18년 중장기(A)	부채	510.6	523.9	525.5	516.6	512.8	-
	부채비율	222	215	202	185	174	-
'15~'19년 중장기(B)	부채	(497.6*)	496.6	508.2	507.0	508.2	510.6
	부채비율	(216)	197	191	177	170	163
차이(B-A)	부채	(△13.0)	△27.3	△17.3	△9.6	△4.6	-
	부채비율	(△6)	△18	△11	△8	△4	-

* 전체 공공기관 부채('14년 520.5조원)의 96%를 차지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위해 자산매각, 사업조정, 경영효율화 등 자구노력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리하고, 공사채 총량이 준수되도록 분기별 점검 추진하려고 함
-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내실화하고 구분회계 제도와 사후 심층평가 제도를 정착하려 함

○ 함의 및 전망

- 가계나 기업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역시 지나치게 많은 부채는 곤란하므로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관리는 필요하고 적절함
- 다만 자산매각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민간기업의 비업무용 자산 보유는 부동산 투기 등 부정적인 목적에 따른 보유일 수 있으나, 공공기관 보유자산의 궁극적인 소유자는 우리 국민임. 따라서 국민 소유의 자산을 특정 시기의 정부가 개인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혜 및 비리 의혹이 불필요하게 제기될 수 있음
- 오히려 비업무용이라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해당 자산을 소유권을 유지한 채 사용권을 임대한다면 지속적인 수익이 창출될 수 있으므로 자산 활용에 관한 가능한 방안을 충분히 고려하며 보유자산 매각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임.
- 목표를 정해놓고 밀어붙이기 식의 자산매각은 비록 비업무용 자산이라 하더라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음
- 또한 우리 국민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채권은 우리 국민의 자산이며, 이러한 공공기관 채권을 매개로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공공기관 채권을 보유한 우리 국민에게 소득 흐름이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도 공공기관 채권을 바라보는 데 유의할 점임

□ [산업] 취업자당(per worker) 부가가치 기준 한국 제조업 생산성,
2008년 일본 추월

○ 9.16. 산업연구원 [e-KIET 산업경제정보], 「대일(對日) 캐치업 이후의 한국 제조업」

○ 주요 내용

- 구매력평가지수(PPP, Purchasing Power Parity) 환율, 취업자당(per worker) 부가가치 기준으로 한국 제조업 생산성은 2008년에 일본을 추월하여 2013년에는 일본보다 약 12% 높은 수준으로, 1인당 8만 달러를 훌쩍 넘어섰는데 이는 독일, 프랑스와 유사한 수준임
- 노동시간당(per hour)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2013년 한국이 일본의 96% 수준으로 거의 근접하며, 독일, 프랑스는 한국의 1.5배 수준임
- 즉 한국의 높은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장시간 노동의 결과이며, 현재의 노동시간 구조 하에서 시간당 생산성이 독일이나 프랑스 수준에 근접할 경우 한국의 취업자당 생산성은 이들의 1.5배에 달하게 되나 그럴 가능성은 비현실적임
- 최근 여러 연구결과들은 장시간 노동이나 비용 절감 중심의 경영전략이 생산성과 혁신에 부정적 효과를 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Zeynep Ton 2014, Pencavel 2014, Economist 2013 등)

* Ton, Z(2014), The Good Job Strategy, New Harvest. Pencavel, J(2014), "The Productivity of Working Hours", IZA discussion paper 8129. Economist(2013), "Get a Life" Sep.24.

- 장시간 노동 체제의 개선과 더불어 생산 현장에서의 혁신 능력 제고를 위한 노사 쌍방의 노력이 필요하며, 혁신과 창의성에 좀 더 높은 가중치를 두는 기업 문화와 경영전략, 산업 정책 등이 필요함

□ [지역경제] 원주·울주·순창·영천 투자선도 시범지구로 선정

- 9.15. 국토교통부는 강원 원주시, 울산 울주군, 전북 순창군, 경북 영천시를 '투자선도지구 시범지구'로 선정함

○ 주요 내용

- '투자선도지구'는 올해 1월에 시행된 지역개발 및 지원법률에서 도입되어, 발전잠재력이 있는 지역전략사업을 발굴하여 민간투자 활성화와 지역성장거점 육성을 도모하는 제도임
- 남원주 역세권 개발, 울주 에너지융합 산업단지는 거점지역에 적용되는 거점육성형으로, 순창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는 낙후지역에 적용되는 발전촉진형으로 유형이 나누어짐

구분	지자체	사업명	주요 내용
거점 육성형	강원도 (원주시)	남원주 역세권 개발	'18년 남원주역 준공에 따른 역세권 개발 및 의료기기산업 육성
	울산광역시 (울주군)	에너지융합 산업단지	원자력 및 에너지융합 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 개발 및 관련 연구시설 유치
발전 촉진형	전라북도 (순창군)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전통 장류산업을 관광과 융·복합된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육성
	경상북도 (영천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군사시설로 단절되었던 도시공간을 항공·군수·ICT 등 도시형 첨단산업·물류 시설로 개발

- 투자선도지구는 외형개발보다 정책 패키지 지원으로, 주변 거점과 연계하고 특화산업 등 융복합 정책을 통해 지역에 창조경제 효과를 적극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제도임
- 공통적으로 규제특례, 자금지원, 인허가 지원 등 혜택이 있으며, 특히 발전촉진형 투자선도지

구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조세감면의 혜택이 더해짐

구분	발전촉진형(발촉형)	거점육성형(거점형)
대상지역	낙후지역(성장촉진·특수상황지역)	낙후지역 외 지역
투자·고용	500억 투자 또는 100인 고용	1,000억 투자 또는 300인 고용
규모	3만㎡이상	10만㎡이상
혜택	재정지원(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
	조세감면(법인세, 소득세 등)	-
	규제특례(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인허가의제 65개 등)	
	자금지원(지자체)	
	인허가 지원 등	

○ 함의 및 전망

- 이번 시범지구 공모에 시도별 32개 사업신청은 평균 8:1로서 높은 경쟁률을 보임
- 지자체의 창의적인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우수모델을 만들고,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지방 지자체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함